

창간준비
1호

혁명 기

Revolution

<http://blog.jinbo.net/wrp>

-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 이젠 소극!
-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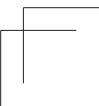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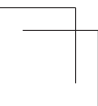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기영

창간준비
1호

Revolution

- 발행일 : 2010년 07월 26일
- 발행처 :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값 : 5,000원



혁명

창간준비
1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4
-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고민택 7
-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양효식 16
-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28
-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 이형로 34
-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42
-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김명석 47
-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호 52
-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59
-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64
- [자료] 사노련 항소심 모두진술문 - 오세철 69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

현 시기 사회주의 혁명정당, 노동자혁명당 건설 투쟁은 바로 이러한 대안적인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 선진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10월에 정식 출범을 준비하며 《혁명》 창간준비호를 발행합니다. 이 창간준비 1호부터 시작해서 출범 때까지 세 번 정도 준비호를 내고 이후 정식 창간할 계획입니다.

가칭)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노위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그 투쟁을 힘차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월간 정세지 《혁명》은 그 당건설 투쟁의 일부입니다. 당장은 월 1회로 동지들 앞에 선 보일



것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월 2회 발행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끝 모를 위기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혁명’이 더 이상 책 속에나 있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전 세계 자본가들은 위기 탈출을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가져오는 고통과 자본가들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도 전 세계적으로 저항과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중국과 인도, 동아시아에서 위기 전가에 맞선 거대한 투쟁의 물결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조 말살 등 자본의 공격과 탄압이 날로 포악해져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투쟁의 물결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방어적 저항을 ‘계급투쟁’으로 의식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계급투쟁은 아직 모든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동자혁명, 사회주의혁명만이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가 사멸의 진통 속에서 가져오는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화, 생존권 위협을 끝장 낼 수 있습니다.

개량은 혁명의 부산물이라는 ‘격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하에서 더욱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기 개량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개량조차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은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과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방어하는 투쟁조차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 구축으로 극복하고,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승리로, 계급투쟁을 혁명으로 이끄는 것이 현 시기 사회주의자들



혁명 창간준비 1호

· 선진노동자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현 시기 사회주의 혁명정당, 노동자혁명당 건설 투쟁은 바로 이러한 대안적인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혁명**

2011년 7월 27일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고민택



9.11 사태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후 한 때, 세계의 역사는 2001년 9.11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등장했다. 미국 본토가 외부 세력에 의해 무참한 공격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를 계기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외치며 비대칭 전략이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들고 나오자 서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사실상 전 세계가 이를 지지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세계경영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염두에 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9.11과 2008년 가을

그러나 9.11이 보여준 정치적 진실은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힘이 약화, 몰락하는 전초를 드러낸 것에 있다. 9.11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미국이 갖는 허점을 보여준 것으로 미국이 결코 철용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미국의 힘의 약화가 무엇을 계기로 어떤 양상을 띠고 나타날지가 아직 불분명했지만 그것은 이제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그 일단이 비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더구나 세계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와 함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아직 건재한 듯이 보임으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2008년 가을 홀연히(?) 솟구친 미국발 금융위기이다. 참으로 그것은 느닷없이 닥친 일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미 그 전부터 축적되고 있었던 바가 현실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이 홀연히 등장한 것처럼 비쳤던 것은 그렇게 믿고 싶거나 비록 현실이더라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치적, 심리적 작용 때문이었으리라.

그 뒤의 상황은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바 그대로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위기만도, 자본주의에서 늘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적, 순환적 위기만도 아닌, 그것들까지를 포함하는, 1929년 벌어진 세계공황에 버금가는 심급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가 폭발한 것이다. 자본주의 심장부 미국에서, 그 어떤 외부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원인에 의해 일어난 폭발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에 불과한 쌍둥이 빌딩 정도가 무너지는 9.11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원의 것이다. 단지 상징이 아니라 본체가 무너지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엄청난 대사건이다. 9.11이라는 징후는 결국 그렇게 본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패권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동시에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공황은 단지 신자유주의 때문 ‘만’이 아니다. 오히려 만약 신자유주의가 아니었다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그 전에 위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관리해 왔으며, 폭발을 유예시켜 온 것이다. 신자유주의만을 원인으로 삼거나 그것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자본주의에 면책을 주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단지 신자유주의만을 반대한다면 신자유주의조차 폐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의한테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



1929년 10월 증권시장 붕괴가 시작된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의 밀버리 저축은행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공황, 전쟁, 혁명

1929년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해다. 1929년은 세계대공황이라 일컬어지는 대사건이 발발한 해다. 이 공황과 함께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등장했으며, 이 공황으로 인해 파시즘이 발호했다. 자본주의 지배계급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즉 뉴딜정책이 마치 이 공황을 극복하게 한 것이며, 파시즘

에 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강변하지만 이 공황은 전대미문의 제2차 세계대전의 살육과 파괴를 통해서만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 그 전 제1차 세계대전 또한 그 당시의 자본주의 공황과 맞물려 벌어진 것으로 자본주의와 전쟁은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의 숨통을 노동자혁명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한편 공황은 전쟁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함께 혁명적 정세를 조성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바로 그러한 정세의 산물이다. 물론 혁명이 언제나 승리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1923년 독일 혁명이 실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혁명적 정세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체가 혁명적 정세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객관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와 태도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일상적 정치활동과 조직적 태세다.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정세를 읽어내는 주체의 능력이 혁명에서 가장 커다란 변수다. 객관은 언제나 주체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렇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객관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와 태도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일상적 정치활동과 조직적 태세다.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정세를 읽어내는 주체의 능력이 혁명에서 가장 커다란 변수다. 객관은 언제나 주체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주체가 혁명적 정세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체는 수동적 일 수밖에 없다



혁명적 정세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체가 혁명적 정세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객관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와 태도다. 주체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일상적 정치활동과 조직적 태세다.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정세를 읽어내는 주체의 능력이 혁명에서 가장 커다란 변수다. 객관은 언제나 주체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는 뜻은 결코 아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이미 늦는다. 객관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직 주체의 능동적 대응만이 사태의 전개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볼셰비키당은 분명 러시아적 현상과 특수성이 반영된 조직 형태지만 주체의 능동적 역할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가를 증명해보였다. 그렇더라도 볼셰비키 조직 형태와 정치활동을 그대로 이식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볼셰비키다. 그럼에도 볼셰비키 조직 형태와 정치활동을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볼셰비키가 그 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혁명세력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숙제다.

자본주의 후진국 또는 식민지 나라들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혁명 또는 반제 민족 혁명은 모두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성장 전화를 이루지 못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들

에서도 인민전선에 의해 혁명이 패배하는 역사를 기록했을 뿐이다. 민주주의 혁명이든, 반제 민족해방혁명이든 모두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들을 이끈 인격체가 아무리 고귀한 품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인민의 노력과 희생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닌 이상에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2단계 혁명 전략은 프롤레타리아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사실 러시아 혁명조차 바로 이 2단계 혁명 전략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이할 뻔 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보여준 비극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자본주의 반혁명에 대비하지 않은 혁명,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혁명의 말로가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이 두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뒤 브라질 PT(노동자당),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 최근 프랑스의 NPA(반자본주의신당) 등이 선을 보이고 있지만 브라질 PT는 이미 부르주아 정치 질서로 편입된 지 오래며, 차베스정권은 무늬만 사회주의일 뿐 그 실상은 변종된 지배계급에 불과하다. 프랑스 NPA는 아직 완전한 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현재 세계가 부딪치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정면 대응하지 않거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투쟁에 의한 권력 장악을 공공연하게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NPA 시도는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PA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노동자계급은 사실상 혁명과 단절됐다. 전후 자본주의 부흥기가 가져온 정세의 산물이자 동시에 혁명세력이 후퇴하고 개량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적 결과 때문이다. 냉전체제가 또한 여기에 한몫했다. 냉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 대립이라는 외피를 띠었지만 실은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가짜 사회주의’ 사이의 경쟁 체제에 불과했다. ‘제3세계’라 불린 블록 또한 반서방 색채를 띠었지만 결코 반자본주의로 나간 적이 없다. 그들 나라의 노동계급 역시 착취의 대상이었으며 노동계급이 전체 인구의 다수가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다. 노동자계급 투쟁과 혁명운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오랜 침묵과 굴종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혁명 세력의 부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세는 큰 틀에서 볼 때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가 노동자 민중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했던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과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순탄했던 적이 별로 없다. 적어도 2008년 이전까지는 그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통치력이 마냥 증대된 것만도 아니다.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 역시 크고 작은 위기를 주기적, 간헐적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결정적 국면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핵심적 이유는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투쟁이 약화된 것과 함께 그들 나



사실 노동자계급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멈춘 적이 없다. 가시적이든 아니든, 크든 작든, 폭발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투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이 노동자투쟁을 쫓 수 있는 조직과 노동자투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강령이 없었던 게 진짜 문제다. 한 마디로 혁명 세력의 부재가 문제의 근원이다.

라의 혁명 세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데 있다. 비제국주의 나라의 투쟁이나 지역적 차원에 국한된 투쟁만으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거의 두 세대에 걸쳐 노동자계급은 어둡고 긴 터널 안에 갇혀 있었다. 그로 인해 맑스주의 전통과 이론은 현실 노동계급 운동과의 연결 고리가 끊기게 되고, 혁명의 현실성과 가능성은 거의 무망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노동자계급 중심성론이나,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은 강단에서의 학술 논문의 주제나 소재 정도로 전락했다. 그런 공백과 지형을 비집고 레닌주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맑스주의에 대한 수많은 갈래의 비판적, 부정적 이론이 우후죽순처럼 번져 갔다.



론, 유물변증법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 등을 다루고 탐구하는 풍토 자체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이룬바 거대 담론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등장한 미시 담론이 대신 차지했다. 미시 담론은 예컨대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지 않았다. 또한 사회를 총체성 차원에서 보지 않음으로써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성과 유기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것들은 그저 고립분산적, 원자적으로 존재하는 우연적, 우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부르주아 국가가 강제하고 억압하는 현실에 눈감았다. 당연히 적대관계, 적대전선 자체가 희미해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맑스주의로부터의 이탈, 포기의 근원은 노동자투쟁이 약화된 데 있다.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사실상 버려졌다. 맑스-레닌주의의 정수이자 핵심인 혁명, 계급, 당, 전략/전술과 같은 실천적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실천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인 역사유물

그 또한 결과일 뿐이다. 원인을 노동자계급에게 돌릴 수는 없다. 사실 노동자계급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멈춘 적이 없다. 가시적이든 아니든, 크든 작든, 폭발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투쟁은 끝

임없이 있어 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이 노동자투쟁을 펼 수 있는 조직과 노동자투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강령이 없었던 게 진짜 문제다. 한 마디로 혁명 세력의 부재가 문제의 근원이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현실과 ‘사노위’ 시도

한국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랬다가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관심과 이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앞서 말했듯이,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노동자투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속에서 일어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에서의 노동자투쟁은 87년 이후 97년 노동악법철폐를 위한 전국 정치총파업투쟁 때까지,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투쟁과 함께 세계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국에서의 노동자투쟁은 세계사적 임무와 역할을 선도적,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극복했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의미에서의 세계사적 보편성, 즉 노동운동의 제도화, 관료화의 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에 빠지게 된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말 쉽게 어찌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으로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조합이 가지게 되는 한계가 가장 큰 작용을 했지만 거기에도 정도와 수준이 있는 바, 그 책임의 주요 소재는 오늘날 ‘진보대통합’을 말하고 있는 그들 개량주의 정치세력에게 있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의 제도화, 관료화와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발호는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세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활동을 펼쳤는가를 보는 일이다.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물론 국가 탄압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없지 않았지만, 노동자계급 투쟁을 적어도 개량주의 정치세력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지 못했다. 그 수많은 노동자투쟁이 있었음에도, 한국의 정치지형이 서구 제국주의 나라들처럼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초기 민주노동당이나 지금의 진보대통합 세력에 대한 추상적, 일반적 비판, 즉 의회주의, 개량주의, 대리주의라는 개념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현실투쟁에서 그들과 차별되는 전략과 전술, 나아가 노동자 권력 장악과 사회주의 정치를 향한 정치적 대안과 전망을 제출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렸다. 그렇다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을 확보, 확립하지

도 못했다. 기껏해야 전투성, 비타협성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외치는 투쟁부대, 투쟁세력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 스스로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 대중화하기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내세워 꺼려했으며, 정파를 극복하고 당건설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행위를 펼치지 못했다.



사노위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와 다른 당건설 노선과 경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논평은 될지언정 의미 있는 쟁점은 형성될 수 없다.

사노위 시도는 바로 한국 사회주의 세력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운동을 위한 운동, 조직보존을 위한 운동을 과감히 떨치고 나아가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을 넘어 한국의 정치지형과 계급세력관계를 바꾸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적 조건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 점에서 사노위 시도 자체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노위 운동은 실패했다. 그

러나 그 실패는 사노위가 시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공공연히 천명하고 실천에 옮긴 사실 자체에 비하면 결정적인 실패가 아니다. 사노위 실패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평가해야겠지만 사노위 실패가 곧 당건설 운동 그 자체의 무망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 그 반대다. 사노위 실패는 오히려 혁명당 건설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사노위 시도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이후 혁명당 건설에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교과서다. 사노위 실패는 당건설 경로와 과정에서나, 혁명운동의 대중화와 현실화를 위해 기존 것을 적당히 합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파적, 조합주의적 정치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노위 출발도 그를 목표로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의 조직화, 현실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단지 이질적인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그건 하나하나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사노위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와 다른 당건설 노선과 경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논평은 될지언정 의미 있는 쟁점은 형성될 수 없다.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인가?

적어도 2008년 가을 이후, 세계는 혁명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그렇다. '혁명의 시대'다.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 운동은 언제나 세계적/국제적 정세와 시야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각국/일국이 처한 구체적 상태와 조건은 국제주

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배치해야 한다. 그 어떤 각국/일국도 아직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표출되고 있는 투쟁이나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쟁도 사회주의로의 연속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승패를 떠나 유일한 침로이다. 각국이 처한 정세의 산술적 합이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세, 즉 세계공황이 각국/일국의 정세를 규정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적어도 2008년 이후 세계정세는 지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또 다시 명증하게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나 단순 반복을 넘어 그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와 강도로 형성되고 있다. 말 그대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행’, 즉 ‘혁명’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경험을 단지 답습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참고하되, 오늘의 현실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혁명 강령과 혁명 전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혁명적 과정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 혁명당 건설을 통한 노동자계급 조직화, 노동자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적대전선 형성을 회피하는 맥락에서 들고 나오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허구성이 증명된 가장 낡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지난 시기 동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고 종속변수, 즉 부차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비록 핵심 지위는 아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특히 동북아는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지역으로 떠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대중화와 혁명운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적어도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대중(계급)투쟁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주의 역량은 아직 취약하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 대중화, 혁명당 건설을 미루거나 유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니 사회주의 역량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낳게 한 주요 원인이다. 다행히 아직 진보정당, 즉 개량주의 세력이 노동자계급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노동자투쟁의 경험이 이미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현실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운동을 포함한 촛불투쟁, 등록금 투쟁 등 대중(계급)투쟁의 양상

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혁명세력이 개입하고 조직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와 여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사회주의자, 혁명세력 자신이다.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비록 그 전체 역량이 아직 취약하고 각 세력은 더욱 열악하지만 적어도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으며, 각자의 구상과 계획은 다르지만 사회주의 당건설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점은 분명 이전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다. 이제 어떤 사회주의 세력도 자신이 처한 상태와 조건과 무관하게 당건설 문제를 비껴갈 수 없으며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조차 벌써 현실에서는 또 다시 뒤쳐질 수 있다. 사회주의 당건설이라는 일반적 과제를 넘어, 다시 말해 그러한 일반적 과제가 구체적으로는 현실에서 혁명을 예비하고 혁명을 수행하려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혁명정당 건설은 다른 한편으로 혁명 강령 건설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강령주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누구든 자신의 강령을 가져야 하며 강령 수준에서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었다.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진전이다. 강령 또한 조직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세력관계를 감안한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거칠고 조야한 형태로 표출되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령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

계급투쟁에 대한 개입은 물론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에서도 사회주의 당건설과 강령이

라는 무기를 들지 않고는 그 어떤 사소한 쟁점조차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형성하기 어렵다. 물론 현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 전술’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정치적 방향(전략) 없는 전술이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실상 이런 운동에 익숙해져 있다. 그조차 전술이 지도력을 획득하고 전략적 침로를 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주의에 갇히거나 기껏해야 전투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 사회주의 세력이 전술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과 강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꿈무늬 전술과 정치적 대기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혁명정당은 ‘인민의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의 배후세력에 머물러서는 결코 지도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제주의 관점과 시야, 전 계급적인 쟁점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방침 제시, 무엇보다도 ‘구체적 상황에 따른 구체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직접적 당건설을 당면 목표로 분명히 할 때만이 그러한 정

혁명 창간준비 1호

치적 긴장과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혁명정당 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비로소 그를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만약 그것을 유보하거나 기각한다면 모든 것은 안개에 갇힌 것 마냥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일상 활동과 정치토론을 혁명당 건설과 혁명운동 현실화를 위한 도상 위에서 펼쳐야 한다. 여기에 그 어떤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혁명의 편이다. **혁명**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양효식

그리스가 부채위기로 국가부도 사태에 처하면서 유럽이 금융 붕괴 직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의 뒤를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부채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감에 따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들)이 와해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도 재정적자와 부채위기로 흔들리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8월까지 부채 법정한도를 현재의 14조3000억 달러(약 1경 5158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국가 부도를 맞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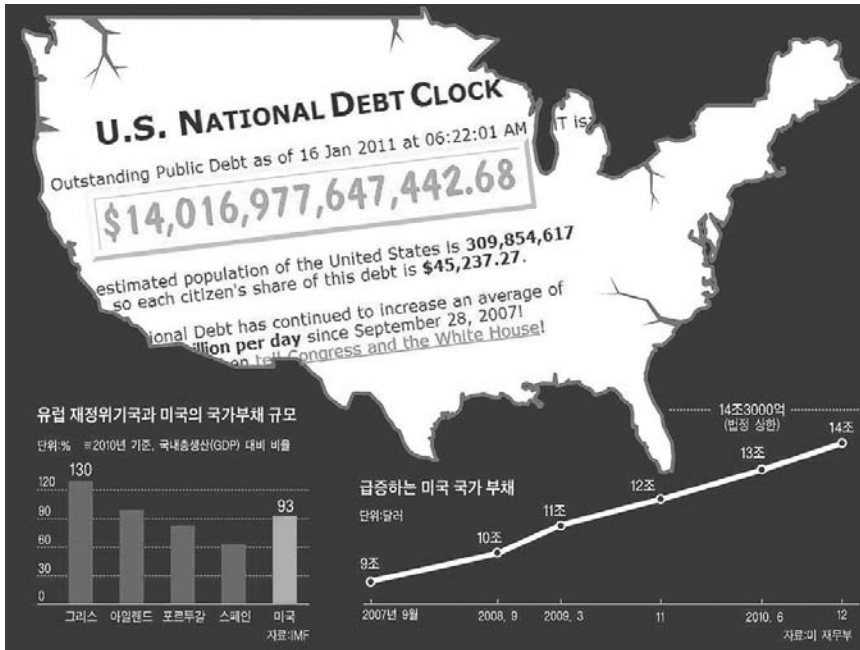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재정위기는 유럽과 미국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국가부채는 쓰나미와 지진 뒤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국가부채(약 400조원)도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명박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복지 확대 논의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비 예산조차도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정적자·부채 위기는 세계경제 위기가 일시적으로라도 '회복'되기보다는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U(유럽연합)에서 국가부도 사태와 미국에서 은행들의 파산 물결이 결합하면 2008년 보다 더 큰 금융공황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는 유로존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기반한 파생금융상품 등 과잉축적된 가공자본을 파괴(주식, 채권, 부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는 유로존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동산 등 자산 가치의 하락 및 그에 따른 은행과 기업의 도산했지만 다시 수익성을 회복할 만큼 충분히 과잉축적을 털어내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구제금융 투입(이른바 양적완화, 즉 달러 찍어내기)으로 위기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미국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는 한편, 구제금융으로 흘러넘치는 달러 자산이 2009년 중반 이래 전 세계의 원자재와 곡물 등에 대한 투기로 흘러들어갔다.



위스콘신주 시위대 의사당 점거

세계경제가 2010년 말에 다시 '더블 덩' (재침체)에 빠져들 기세를 보이자 미국 연준은 11월에 '값싼 화폐 정책'(인플레이 정책)의 추가 연장을 결정하여 6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물가 급등과 새로운 투기 거품(원료, 식료품, 국가부채에서)만 가져온 채 지난 6월말로 2차 양적완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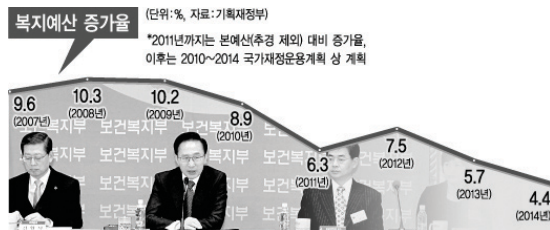
종료해야 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어렵다보니 지금 부채 한도 증액과 3차 양적완화 문제를 놓고 국가부도 사태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 내에 쓰디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당장 미국 지자체들의 높은 부채 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 양적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지자체들의 연쇄부도와 함께 중간규모 은행들의 대대적인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상황이다. 전체 세계경제로 볼 때 이것이 최대의 위험요소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와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행, 투자회사들, 대기업들)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EU(유럽연합)에서 국가부도 사태와 미국에서 은행들의 파산 물결이 결합하면 2008년 보다 더 큰 금융공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재정위기에 휩싸여 있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구제금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호러 시나리오가 현재 주요 은행들과 대기업들, 그리고 정치가들을 휘감고 있다.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 - 재정적자를 빌미로 한 위기 전가 공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후 2년 동안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번지면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다 노동자 민중들이 이 때 이미 뒤집어썼다. 그러나 당시 2008년-09년 공황의 첫 2년 동안은 누구나 경제위기의 책임이 금융과탄을 가져온 거대 은행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최소한 금융자본의 탐욕이 위기를 부른 주범이라는 것이 대중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었고, 여기에 자본가들도 감히 이의를 달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재정적자 · 국가부채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비판의 화살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한테서 떠나 엄한 데로 돌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이 공공 서비스 등 복지비 지출과 연금 · 임금을 경제위기 책임 논쟁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

이 해서” 위기를 낳았다, 즉 “의료와 교육 등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연금과 임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뻔한 거짓말이지만 곧 복지비 지출삭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성공을 거둔다.

실제로 지난 6월 29일 그리스 의회가 2차 구제금융을 앞두고 통과시킨 재정감축안을 보면 마치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복지비 지출과 노동자들의 임금 · 연금 때문에 재정적자와 부채 위기가 생겨난 것처럼 온통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고용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져 있다. 통과된 긴축안은 부채 상환을 위해 2015년까지 예산을 줄여나가 280억 유로(그리스 GDP의 1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노동자 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세를 13%에서 23%로 인상(전형적인 ‘서민 증세’)하고, 15% 임금삭감을 실시하며 주당 노동시간을 37.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15만 명 인력감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대적인 정리해고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그리스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노동자와 청년들이 격렬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다.



6월 29일 그리스 의회 의사당 밖에서는 노동자와 청년들이 격렬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경치는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폭력 진압에 나섰다.

7월 14일 이탈리아에서도 상원이 46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임금 동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인상(즉 복지 축소) 등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 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부채 한도액을 증액시키는 대가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를 들고 나와 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리스나 미국처럼 아직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지 않은 영국에서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재정적자를 빌미로 임금 및 복지 삭감, 연금개혁, 공기업 사유화와 정리해고, 교육 재정 삭감(대학 등록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6월 30일 공공부문 노동자 75만 명의 총파업을 비롯하여 청년층과 가난한 민중들이 항의투쟁에 나섰다.



윤승현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한뉴스 nylam)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위기는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 때문이라고 부르주아 언론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투입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보수언론과 전경련, 경총 등이 유럽 나라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위기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 때문이라고 선전하면서 현재 한국에서의 “복지 포퓰리즘”이 유럽 같은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것

은 재정적자를 빌미로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 예를 들어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오바마 정부에게 대대적인 긴축 재정과 복지비 삭감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 공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마치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자본가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부르주아 언론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세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던가. 재정적자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투입 때문이다. 그리고 공황으로 인한 국가 세수의 붕괴(주로 기업 이윤 축소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감소에서 비롯한 세수 급감)와 치솟는 실업수당 비용(정리해고, 일자리 축소로 인한)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위기가 재정적자와 부채를 야기시킨 것이지, 의료와 교육에, 연금과 임금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국가부채 위기는 금융자본을 필두로 한 자본가계급이 국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손실을 사회화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사실 당시 어마어마한 액수의 구제금융 조치 같은 자본가 국가의 ‘경제 살리기’ 개입이 없었더라면 세계경제는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그 덕에 세계경제 붕괴는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지만 그 유예의 대가로 생긴 것이 바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 막지 못하면 일시 유예된 세계경제 붕괴는 다시 직접적 일정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자본가 국가의 '경제 살리기 개입' 없었더라면 세계경제는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그러한 개입은 일시적으로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붕괴를 유예시킬 뿐이다.

리스 국가부도가 현실화되면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같은 것은 애들 장난처럼 보일 것이라는 경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의 지배계급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위기를 불러온 이 같은 대대적인 국가 개입으로 세계경제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2008년 이래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모순을 조금도 완화시킬 수 -- 해결은 고사하고 -- 없었다.

이윤율 하락에 따른 과잉축적 위기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 간의 대립 · 충돌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 모순의 발전은 19세기 말까지의 자본주의를 특징지었던 자본가들 간의 자유경쟁이 독점자본주의로 대체되는 지점으로부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가져왔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더 높은 규모로 자본의 가치증식은 자본주의적 이윤 전유의 족쇄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침예한 모순을 빚는다. 자본가는 노동 생산성을, 그리고 그에 따라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산업의 평균 생산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경쟁 자본가들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전체 투하 자본 내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노동, 즉 가변자본의 비율이 줄어드는 데 반해 단지 가치를 전달할 뿐인 기계, 원료, 부동산 등 불변자본의 비율은 상승한다. 이러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을 낳는다.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에 자본가들은 취득한 잉여가치를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길 점점 더 꺼려하게 되고 비생산적 부문으로, 금융 투기로 돌린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보라.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혜택을 통해 대기업의 이윤축적이 생산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그리하여 사회 전반의 소비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권 내 가장 보수적인 세력(예를 들면 한나라당 내 친박세력)까지도 나서서 낙수효과론은 "실패로 검증된 이론"이라고 반박하며, 이제는 부자감세 혜택을 철회하고 확대된 세수를 통해 서민 복지와 수요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케인스주의 노선을 주창하기까지 한다. 이는 물론 선거를 의식한 '좌클릭' 정치 쇼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대기업에 아무리 감세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기업의 팔을 비트는' 압박을 해도 자본가들 입장에서 이윤을 가져올 전망이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할 리가 없는 현실을 보수세력 스스로의 입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자본가들은 투기 카지노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취득 이윤을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부채 축소 혹은 해외투자에 지출한다. 잉여가치를 낳는 생산적 부분에서의 낮은 이윤율 때문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과잉 자본이 쌓여 있는 상황(그래서 비생산적 금융부문의 투기로 몰리는 상황), 이것이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이다.

2008년 금융공황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과잉축적의 산물이다. 단순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면책 시켜주는 논리가 된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밝힌 자본 축적 및 붕괴의 법칙은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로뿐만 아니라 현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데서도 열쇠를 제공한다. 현 위기의 본질은 지속불가능한 신용 확



대와 축적 붕괴로 끝나는 자본의 과잉축적/ 과잉생산 공황이다. 정확히 맑스가 미래의 공황에 대해 자기 시대에 관찰하고 예견했던 것처럼, 과잉축적은 자본의 가치파괴와 불황이라는 폭력적인 과정, 즉 공황을 가져왔다. 이른바 ‘금융의 비대화’로 표현되는 가공자본의 증대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산물이자 잉여가치 생산 부문들에서의 과잉축적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 경로로부터 비정상적인 이탈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 축적의 필수적인, 실로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빵을 타기 위해 줄지어 선 뉴욕시민들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또한 중국, 인도 등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결과이다. 애초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거대한 팽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가변자본 및 불변자본(특히 고정자본 부분)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졌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제조업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급속한 중국 산업의 성장이 원자재와 식량,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면서 애초의 디플레이션 효과는 끝나버렸다. 이러한 모순의 작동이 2008년 공황을 그 직전 공황보다 더 첨예하게 만들었고, 중앙은행들의 끝없는 신용 확대 능력에 제약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경제가 동시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현 위기의 뿌리와 성격

현 위기를 7-10년 주기의 통상적인 순환적 위기를 넘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

로 만든 것은 이 현재의 위기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구조적인 과잉축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은 수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되었다. 전쟁으로 자본의 과잉축적이 확실하게 해소되면서 20여 년 간의 장기호황을 누렸지만, 다시 1973년-75년 과잉축적 공황이 터졌다. 이후 이삼십 년 동안 세계경제는 과잉축적과 하락하는 이윤율, 위기의 가중화·누적화 경향, 생산력의 정체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다. 1990년대 이래 부르주아지는 세계화 프로젝트(이른바 신자본주의 공세)를 통해 이윤율 하락 및 정체 경향을 극복하려 했지만 이 경향은 역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강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매우 불균등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서방 제국주의 중심국들과는 달리 중국과 인도 등에서 이 시기에 자본의 가속화된 축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91년에서 2008년 공황 발발까지의 세계화(글로벌화) 시기는 부르주아지의 전면적인 공세로 특징지어진 시기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동구권의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 ‘제3세계’의 예속과 착취 증대 등, 이러한 공격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잉여가치율을 증가(주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가)시킬 수 있었고 제국주의 초과이윤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쇄조치’로 하락하는 이윤율을 멈추게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질 정도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너무 고도화 --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쇠퇴 경향을 가져오는 근원 -- 되어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증가된 이윤 총액 가운데 자본 축적으로 들어가는 몫은 계속 감소했다. 투기 영역으로 이동하거나(거액의 화폐자본이 고도로 투기적인 통화시장 및 헤지펀드 세계로 이동했

다), 부채상환으로 지출 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져갔다. 세계화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다시 소생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기의 더 중요한 결과는 부르주아가 갈수록 탐욕에 눈이 멀어 근시안적으로 오로지 미래의 비축고에서 미리 꺼내 씹으로써만(예를 들어 사내유보금에서 차입) 세계경제의 대대적인 쇠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 일정한 안정을 가져온 것도 대규모 부채 누적에 의한 것이었고, 소위 세계화의 '변영'을 낳은 것도 투기 부문의 거대한 인위적 팽창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의 모순을 잠시 은폐하고 얼버무릴 수 있었지만 이는 곧 미래의 모순을 팽창시키는(카드 돌려막기 식의) 결과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세계화 시기에 이러한 악화되는 과잉축적 경향은 세계경제의 심장부 미국에서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들의 잉여가치 가운데 자본스톡 확대를 위한 투자 몫을 줄여 나갔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본축적 과정의 이완은 순투자(즉 확대 투자) 수준의 감소로 반영되었다.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에서 어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축적 과정의 이완 경향은 세계화 시기에 줄지 않고 오히려 아주 뚜렷해졌다.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순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1961-73년 기간 4.2%에서 2001년-05년 기간 2.0%로까지).

사용되지 않는 잉여자본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의 가치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산업설비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에 대한 증거이다. 미국 내 산

업에서 설비가동률이 고점에 이른 것은 1980년대에 85.1%, 1990년대에 84.9%였다. 2000년 이래 설비가동률은 결코 81% 지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 반면 이 세 시기 경기순환(위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에서의 저점들은 각각 78.7, 73.5%, 그리고 2009년 6월에 68%라는 역사적인 저점에 도달했다. 거칠게 말해서, 2009년 중반에 미국에서 생산적 자본의 약 1/3이 가치증식 과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우리는 세계화 시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극대화되었음을 본다.

이 비틀거리는, 위기에 시달리는 자본축적 과정으로 인해 잉여가치는 더욱 더 투기 부문으로(2007년에 미국 이윤 전체의 41%가 금융부문에서 나왔다!) 흘러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외 자본 수출로 빠져나갔다. 결과는 자본 확대재생산의 하향 곡선으로, 이는 세계화 시기에 상품생산 증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 제국주의 중심국들에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5%-13%였었는데 이 추세가 1980년대에는 1.7%-4%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0.5%-1%에 불과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수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되었다.

이와 같이 2008년-09년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는 앞선 자본주의 시기, 특히 세계화 시기에 축적된 모순의 결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1948년-72년)처럼 1992년 이후의 새로운 세계화 시기도 거대한 생산능력의 파괴로 시작했다. 이윤을 가져올 수 없는 기업(특히 러시아와 중국의)이 폐쇄되고 심지어는 아예 폐기되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1939년-45년의 훨씬 더 큰 파괴와는 달리 세계화 시기의 시작 때의 파괴 과정은 과잉축적된 자본을 충분히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고,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생산력 정체 경향을 들어내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1992년-2007년의 세계화 시기는 결코 세계적 규모로의 생산력 발전이 지배적인 추세가 되는 자본주의 팽창기가 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의 장기불황과 정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격렬한 가치파괴 공황,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미약한 회복 --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잉여가치 생산부문들을 쇠퇴하는 상태로 남겨 놓은, 또는 매우 부진하고 완만한 성장세로 머무르게 한 그 미약한 회복 -- 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1992년-2007년의 세계화 국면은 1973년-92년 국면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생산력 정체 경향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 시기는 결코 상향 발전의 ‘장기파동’ 국면이 아니다. 전후 호황이 종식된 1973년 이래 자본주의 체제를 괴롭혀 온 고질병인 구조적 과잉축적이 근본적으로 극복이 되지 못한 시기이다. 구 ‘제3세계’에 속한 신흥국들 및 중국에서

생산의 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기는 가장 발달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제를 구조적인 과잉축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다. 가장 발달한 경제들에서의 지배적인 추세는 여전히 정체 경향이었다.

세계화 시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번영’과 ‘역동성’을 보여준 시기이기는커녕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정립해 낸 제국주의 시대의 주 특

세계화 시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번영’과 ‘역동성’을 보여준 시기이기는커녕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정립해 낸 제국주의 시대의 주 특징들(기생성, 독점, 부후화와 쇠퇴,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이 확장되고 전면화된 시기이다.

징들(기생성, 독점, 부후화와 쇠퇴,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이 확장되고 전면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레닌이 다음과 같이 정의한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 -- 자본주의의 쇠퇴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 -- 에 속한 한 시기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역사 단계이다. 제국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이다. 기생적인 또는 부후 쇠퇴하는 자본주의이다. 사멸하는 자본주의이다.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대체가 근본 특징, 제국주의의 본질이다.”

이행 시대로서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인 성격은, 자본주의가 생산력 및 생산의 사회화를 크게 높여냈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의 충돌 -- 너무 침해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붕괴를 일정에 올릴(물론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도의 충돌 -- 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한 번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나의 갈림길에 직면한다. 현재의 극적인 경제위기는 레닌 제국주의론의 타당성을 완전하게 확인해 준다.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는 생산의 사회화와 국제화는 자본주의가 역사적 퇴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쇠퇴하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산력의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레닌의 다음과 같은 규정은 지금 특히 옳다.

“왜 제국주의가 사멸하는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자본주의인지는 분명하다. 자본주의로부터 성장해 나온 독점은 이미 죽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그 이행의 시작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노동의 거대한 사회화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무르익어서 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 시대, 즉 막 붕괴하려 하는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이다.”

세계화 시기의 특수한 특징들이 우리 시대,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의 본질적 특징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 내의 한 시기로서 세계화 국면은 쇠퇴하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한으로까지 축적한 시기이다. 현 위기가 순환적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인 것은, 제국주의 단계의 최근 국면으로서의 세계화 시기에 이 누적되고 극대화된 모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개량주의자들의 공상적 해결책

개량주의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나아가는 것을 한 사코 기피하기 위해 언제나 체제 내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찾는다.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금융 통제, 금융 공공성 강화, 토빈세 부과 등, 단지 표피적인 접근에 바탕한 공상적인 방안들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았다. 재정 적자와 부채 위기가 터지자 이제 부자증세와 조세정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보정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포함하여 진보진영에 널리 퍼진 논리가 있는데 탈세를 막고 부자들에게 대한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빈부 양극화 증대와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세금 탈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세를 막고 부자증세를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반복되는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고, 따라서 우리의 해결책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자본가계급



개량주의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공상적인 방안들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다.

은 재정 적자가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피주기식 복지” 때문에, 심지어는 “각종 복지혜택으로 노동자들이 놀고먹기 좋아해서” 일어났다는 등 온갖 참주선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적자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복지비가 삭감되고, 등록금을 1천만 원이나 내면서 대학에 다녀야 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강요받고 있고, 연금 계약으로 연금 수령액을 삭감 당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개량주의자들도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탈루 세금 환수를 요구하고 탈세와 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한다. 부자 증세와 부자에 대한 누진세 요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민주대연합 정부가 들어섰다고 가정해보자. 탈세를 막고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지지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위기를 종식시키고 긴축을 멈추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만일 탈세를 막는다면 자본가들은 그들의 돈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그래서 탈루 세금 환수 요구를 넘어 자본가들의 은행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몰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은행들을 보상 없이 국유화하여 노동자통제 아래 두어야

긴축에 반대하는 전투에서 모든 승리는 의심할 바 없이 국제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란의 대응에 부닥칠 것이다. 국제 금융자본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국가 전체를 파산시킬 기세로 덤벼들 것이다. 왜 대중적인 반긴축 운동의 논리가 전 계급적인 정치권력 투쟁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왜 긴축에 대한 전투적 반대가 반자본주의 논리를 취하는지 이유도 여기 있다.

한다고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긴축을 거부하고 유용한 일자리 투자에 수십조 원을 지출하면 국제 채권시장, 즉 금융자본가들은 원화를 공격하여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다.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임금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임금을 실제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국가부채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기꾼들을 감옥에 보내고 금융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백조 원을 몰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부채에 대해 외국 금융사들이 재정적자가 너무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신 민주대연합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의 거대한 압력에 곧바로 굴복하여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삭감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급진적인 정부가 삭감안을 거부하고 케인스주의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지출을 시도한다면 자본가들은 투자 파업에 착수하여 자금을 차단하고 한국 원화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거대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기금을 몰수하고 외환에 대한 국가 통제를 부과하고 일체의 채무를 무효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다른 나라들로 확산시킬 것이다.

복지 삭감 및 긴축에 대항하는 우리의 행동강령은 고액 탈세자들의 탈루 세금 환수 요구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할 것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부채 무효화와 국채 보유자들의 투기자금 몰수 요구를 포함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4년 안에 부채와 적자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민주대연합 정부가 이를 2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이다. 이 세계의 국채보유자들과 금융자본가들한테 당신들에겐 단 한 푼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말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도 우리가 한 선례를 따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국가부채 위기의 전염병이 EU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제 저들은 이러한 투쟁의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유로존에서든 한국에서든 결과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의 안정화와 자본의 확대재생산 안착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일자리와 복지가 파괴된 폐허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복지 삭감과 긴축에 저항하고 그것을 분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와 이집트 노동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분투를 넘어설 수 있다면 말이다.

긴축에 반대하는 전투에서 모든 승리는 의심할 바 없이 국제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란의 대응에 부닥칠 것이다. 국제 금융자본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국가 전체를 파산시킬 기세로 덤벼들 것이다. 왜 대중적인 반긴축 운동의 논리가 전 계급적인 정치권력 투쟁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왜 긴축에 대한 전투적 반대가 반자본주의 논리를 취하는지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의 투쟁들을 대안적인 체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연결시켜서 이 반자본주의 논리를 대중적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부채 위기는 자본가들이 국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손실을 사회화시켜서 생긴 것이다. 부채는 계속 늘릴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있고, 이제 막장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가들이 설사 이번엔 채무불이행이나 국가부도를 넘기고 이후 2년을 버텨낸다 하더라도 다음번 금융위기는 자본가 정부들이 또 다시 구제금융 기금을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번에는 이번보다 훨씬 더 깊은 체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혁명**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남궁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급속하고 거대한 유럽·중동의 계급투쟁 흐름과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부르주아 계급이 이 위기 극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다. 미국과 유럽 경제위기는 실시간으로 한국 자본주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양극화(즉 노동자 궁핍화) 현상을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한국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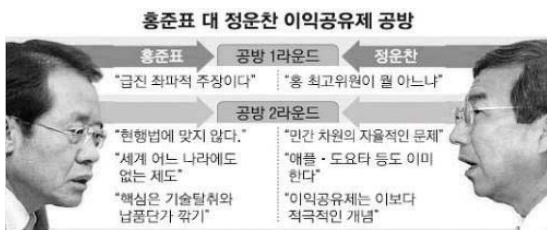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에 미국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은 공공부문 정리해고, 임금삭감, 노동조합 단체협상권 박탈에 맞서, 1970년 베트남 전쟁 반대 이후 대규모 시위를 벌여 위스콘신 주의 사당을 16일 동안 점거 농성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는 연일 시위와 광장 점거, 파업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

으로 한국은 조용하다.

유성 기업 투쟁과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크레인 농성투쟁(희망 버스 투쟁), 반값 등록금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대대적인 파업과 가두 투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립된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지만 연대 총파업으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총파업도 그 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매번 ‘뺑파업’이라고 비난 받는 가운데 이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현장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아예 포기하고 오직 진보대통합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만이 문제가 아니다. 진보대통합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세력들을 보면 계급투쟁을 확대시켜야 할 임무를 모두가 한결같이 포기한 모습이다. 투쟁 확대의 포기과 진보대통합 ‘올인’은 상호 연동되어 있는 것인가?

지배계급의 위기관리 본능

최근 우리는 지배계급이 내놓는 몇 가지 담론을 듣는데, “공정사회” “초과이익공유제” “반값등록금” 등이 그 예다. 공정사회란, 말 그대로 MB정부가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 ‘군기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과 질서를 엄격히 적용해서 노동자 파업이나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에게 날라드는 수많은 출두요구서와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강릉 청년단체협의회, 인천지역 노동자,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보라!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초과이익 공유제”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널 법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재벌개혁 정책을 정부·여당에서 내놓고 논쟁을 하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자본가 이견희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 본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보자.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정통 보수 박근혜 측근은 “대학생 등록금 45% 지원을 약속하고, 보수보다는 진보에 강조”를 내걸고서 당 지도부에 선출됐다. 그 이면에는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 운영을

보수적으로 했다가는 망한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물론 립서비스 차원이겠지만, ‘노동자투쟁의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지배계급의 자본주의 위기관리 본능이 발동되는 것 같다. 보수적 진보(?)를 말하며 이제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고도의 전략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 대통합 논의

지배계급의 정치세력 및 블록들 간의 이해나 갈등을 자본주의 경제위기, 계급투쟁과 연관시켜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주아 정치평론가들이 즐겨 표현하는 인물주의나 지역·계파 중심으로 정치행위를 분석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지배계급은 대(對)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염두에 두며 ‘자본(주의) 재구성’을 위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5월31일에 진보대통합에 합의했다. 사회당은 진보대통합 합의문 서명에 불참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구상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이나 진보통합-복지국가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진보대통합 참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개혁 진보 좌파 정치세력들의 정치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보 좌파 정당 운동의 통합 역사와 행태를 보는 것

이 중요하다. 여기서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진보(정당)대통합 정치의 주체들의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를 겨냥한 과거 진보 · 좌파 통합의 실패

91년 7월 인민노련, 노동계급, 삼민동맹 3파 연합은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진보정당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당시 <한사노당>은 “광범위한 좌파연합을 통한 대중정당 건설과 이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독자적인 분립”이라는 기본체제를 확정한다. 이른바 3파 연합인 <한사노당>은 사상 노선에 대한 토론과 확립 없이 (이른바 좌파 연합을 통한 대중정당 건설을) 연방주의적으로 구성하는데, 92년에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민중당과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해산 당한다.

95년 인민노련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대표 노회찬)와 민중정치연합 (대표 김철수)내 우파인 (사노맹이 제외된) 사회당 추진위 세력은 진보정치연합을 건설하고 곧 바로 96년 15대 총

선에 나섰다. 당시 진보정치연합은 15대 총선방침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진보정치연합은 개혁신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중심으로 15대 총선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진정추 세력을 대표하는 노회찬은 개혁신당을 거쳐 ‘꼬마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선출되고, 강서을에서 조직책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노회찬은 96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출마자격을 얻지 못했다. 15대 총선 실패 이후 진보정치연합은 사실상 내부 갈등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식물’ 정치조직으로 존재한다. 이후 97년 전국연합과 국민승리21을 구성, 민주노동당에 참가한다.

한편, 93년 민중회의에서 분화 발전한 우리청년회는 97년 대선 독자 후보 논쟁을 둘러싸고 정치연대를 탈퇴한 뒤, 98년 독자적인 <청년진보당>을 결성한다. 이들은 2000년 16대 서울 전 지역 총선후보를 낸 뒤, 이후 반(反)조선노동당 정체성을 기초로 한 사회당으로 개명한다. 사회당은 2002년 대선 독자 후보 활동을 한 이후 내부 사상투쟁에 휩쓸리고, 사회당 내 자율주의 세력이 이탈한다. 사회당은 특히 2007년 대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우는데, 사회적 공화주의 요체는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 “민주주의” “평화주의” “신자유주의 반대” 등이다. 사회당은 몇 번의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지만, 의회 진입의 높은 벽을 매번 실감하고 실패한다.

90년대 공개적으로 등장한 진보 좌파 주류 세력은, 군부파시즘 타도라는 역사적 시기를 걸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의 일부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민족해방파의 부르주아 (김대중)비판적 지지에 맞

97년 대선 당시 국민승리21 대선 구호 “일어나라 코리아”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구호였다. 이에 반발하여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일어나라 노동자” 현수막 교체 운동을 펼쳤다. 국민승리21은 민주노동당 전신이다.



서 투쟁한 점 또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봤듯이 진보 좌파 ‘주류’ 세력은 전략적 과제로서 ‘선거 정치에 집착’하면서, 체제 내적 운동으로 전화된다.

사실 진보, 진보정당, 좌파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정치 운동세력이 85년부터 89년 비합법 정치운동 시기에서 벗어나, 90년 공개 정치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썼던 용어다. 한편에서는 90년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를 방어하면서 ‘진보 좌파 정당’ 용어를, 다른 한편에서는 NL(민족해방운동) ‘반정립을 위해 좌파’라는 말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 진보/좌파라는 단어는 NL 운동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사상 이론 혼란에 따른 90년대 방어적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관통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진보/좌파는 사상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불명확한 개념이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진보 좌파 정당 주류 세력은 역사적으로 사민주의 선거용 정당으로 나갔다.

2008년 민주노동당과 분당한 진보신당은 개혁주의적 (노사모 수준) 성향의 촛불당원이 대

거 들어와 그 옛날의 좌파 진보 정체성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진보신당 안에는 이번 진보대통합과 관련해서, 아예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참여당까지도 함께 하자는 세력,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자는 세력, 사회당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보 좌파로 표상되는 진보정당은 명확히 실패로 귀결되었다.

사회당은 진보 좌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데, 그 정점이 바로 ‘반조선노동당’ 핵심 슬로건이다. 이는 당의 성격을 반국(半國)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주의 관점과 세계혁명 전략을 스스로 제거해버린다. 또한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역사에서 부르주아 국가와 민족주의 형성은 영토를 중심으로 한 (국민/민족) 주권, 민족자결권을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를 모토로 한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당이 과연 사회주의자 정당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른바 이들이 최근에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자본주의 ‘생산’ 문제는 외면한 채, ‘분배’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인 전략을 취한다.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후 2008년 진보신당 창당대회 모습.

3년이 지난 지금 진보신당 안에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부르주아 정당인 민주당, 국민참여당까지도 함께 하자는 세력,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자는 세력, 사회당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존재한다. 진보신당은 최소한의 진보·좌파 정체성마저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 대선 판짜기 : 진보대통합 논쟁의 의미

민주진보대통합은 2012년 4월 총선과 대선 선거 정국 판짜기용이다. 그 정치적 귀결은 반MB 정권교체이며 2013년 연합정부다. 따라서 이를 위한 부르주아 정치가와 진보정당들 상층부 인사들의 ‘그림 그리기’와 이합집산이 상층부 차원에서 추구된다. 부르주아 계급정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 4당 통합을 주장한다. 진보정당 상층부 일각에서는 연합정부 하에 장관자리까지 언급하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진보대통합을 주장하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1만 추진위원을 제안하면서, “노동자 집권”, “노동자는 하나”, 그래서(?) “당도 하나”라는 1국 1정당론에 기초한 진보정당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진보 대 반민주’ 구도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진보세력의 총 단결인 ‘정당연합’을 추구한다. 이는 결국 대선시기 민주당 비판적 지지로 귀결되며, 이들은 다시 노무현식 대선 바람을 꿈꾼다. 한 정치연예인은 “국민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백만 민란과 야권 통합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발 빠른 부르주아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에게 물려줬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진보대통합 추진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민주진보대통합에 진보신당 스타급 연예인 심상정과 노회찬 참여. 이 ‘그림 그리기’는 과히 공상적이지도 않고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진보신당 당원중 상당수가 자유 개혁주의적 성향임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NL과의 친 국민참여당 행보는 사실 80년대부터 노선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NL과의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되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정치노선은 이론적으로 ‘민족적’ 내용 확보가 핵심이며, 이는 언제나 국민경제를 둘러싸고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배/종속’이라는 관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주아 경제학의 관념이다. 우리는 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부르주아 연구 · 정책 보고서가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를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구축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를 쓸하게 본다. 왜냐하면 국내 부르주아에게 국외 부르주아와의 경쟁과 상호 모순적인 협력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르주아 세력과 연합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문구’ 강령 삭제는, 민주노동당의 ‘친 부르주아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아직도 신자유주의 반대?

다른 한편, 보수-개혁-진보(좌파) 구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진보신당(새로운 진보정당)독자파, 사회당,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새노추)로 표현되는 세력이며, 진보대통합에 반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 세력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신자유주의 진보정당에 동의하며, 정치적 목표로 여전히(!)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과 전략”을 모색하면서 “진보정치 혁신세력과 연대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구한다.

일부 좌파 사회운동 단체는 사회운동 관점에

서 “통합진보정당 내부에서 좌파적 블록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중앙과 등과 협력하여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중심의 방침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함께와 진보교연은 “진보대통합에 찬성하면서, 국민참여당 지지”로 요약된다.

이들 세력들은 여전히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애매모호한 진보/좌파 정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서 역사적 과정에서 봤듯이, ‘자본주의의 나쁜 측면들’에만 반대하는 ‘윤리적 반자본주의(규제)’ 운동에 머무른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 전망을 뒤로 미룬 채, 기껏해야 자본주의 국가기구 ‘좌파’의 역할에 머무른다.

이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에서 멈춰서 있다. (2008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자본가 빌 게이츠조차 신자유주의 폐해/반대를 주장하면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는 재벌의 특정한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일반론적 의미 수준에서 머무른다. 반이명박 정부에 머무르면서, 결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과 침해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다. 신자유주의 반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귀착은 서구의 계급타협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당 운동에 나서야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다. 역사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진보 좌파의 이합집산 세력은 실패로 끝났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총선/ 대선 선거대응을 위한 개편이며, 기껏해야 서구에서 실패한,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 재판이다. 특히 통합진보정당론자들은 소부르주아 민족주의(NL)와의 동거를 통해 끊임없이 인민주의와 사실상 반혁명적 시각을 확산시킨다.

자본주의의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노동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의 계급투쟁 능력과 권력의지에 달려있다. 이른바 ‘부르주아 개혁 정치(제도권 민주주의)’, ‘윤리적 반자본주의(규제)’ 운동을 뛰어넘는 혁명적 시각과 실천이 절실하다. 자본주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좌파, 진보라는 애매한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망에 기초한 당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실천적으로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계급투쟁을 추동하고, 이론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조건과 경과,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일체의 머뭇거림을 버려라! **혁명**



민주노동당 창당대회(2000년 1월)



당 강령을 개정한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2011년 6월)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이형로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 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

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강령 중에서」

“자주 평등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향해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 「2011년 6월, 민주노동당 개정 강령 중에서」

들어가며

지난 6월 민주노동당은 정책 당 대회에서 창당 당시의 강령을 폐기하고 위와 같이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는데,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부르주아 좌파정당의 강령으로 당의 지향을 분명히 한 강령개정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했고, 당을 주도하고 있는 노선은 이른바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기반으로는 노동자 대중정당을 표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좌파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강령과 정치노선에서 사회주의의 가치를 주장하든 사회주의를 참칭하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혁명, 노동자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 결국 자본주의 체제 내의 좌파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의 개정 강령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사회민주주의보다 후퇴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언젠가 얻어야만 할 이상으로 여겼고, 그 실현을 인간의 선한 의지나 지배계급의 선의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맑스주의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전개를 통해 설명하고, 자본주의의 소멸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과 전제를 파악하여 과학으로 정립하였다. 맑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를 타파할 혁명의 주체이며, 그 자신의 해방이 보편적 인간해방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유일한 노동자계급

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인 맑스주의로부터 가장 먼저 이탈했는데, 이들이 바로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대리주의’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리주의는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로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반노동자적 사상의 한 조류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를 지배하면서 모든 착취를 폐절해나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정을 폐기하거나 왜곡시켰다.

대리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라는 양 극단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추구했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기는커녕 자본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르주아 진영의 한 축이 되었다. 한편 스탈린주의와 그것의 모든 변종들(김일성주의 포함)은 사회주의를 참칭하면서 당독재와 국가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하다가 결국 사적자본주의로 회귀하여 이들 또한 부르주아 진영에 완전하게 포함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대리주의의 두 조류 중 사회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스탈린주의 변종 또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와 KFC를 받아들일 거라는 소식과,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악의 가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노동자혁명이 일어나거나 사회주의적이

있던 적이 없었듯이, 가짜 노동자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단 한 번도 노동자혁명을 주장하거나 사회주의적 실천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은 같은 맥락이며, 이제야 자신들의 계급적 본성을 드러내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치의 근원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한국의 민주노동당 또한 위와 같은 대리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들 정치의 중심에는 대리주의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노동자계급을 정치와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존중해야 할(?) 득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문에서 부터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진보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인의 총화”를 이루어낸다고 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기 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탈계급적인 대중캠페인, 대중동원, 표 구걸, 계몽주의 같은 정치형태가 민주노동당 운동의 전형이 되었다.

이곳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이 이라는 사회주의 가치는 당이 지향하는 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계도용으로만 필요했다. 이들에게 사회주의가 계몽과 이상이나 자본주의를 타도하고자 하는 강력한 실천이 요구되는 운동의 당면 목표였다면 처음부터 강령에 넣기조차 불편한 가치였을 것이다. 이것은 설사 민주노동당의 개정 전 강령에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사

회주의란 19세기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언젠가 언어나만 할 이상일 뿐이라서,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현실에서 투쟁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량을 통하거나 지배계급에게 선의를 촉구하여 자본주의를 바꿔 나가고자하는 개량의 정치, 계급협조의 정치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 정도의 자본주의 개조를 목표로 하여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강령에서 사회주의 가치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을 표방하는 다함께는 이번 강령개정을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권교체와 집권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동맹하고 당의 정체성을 후퇴시키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돈과 인력을 주되게 노동조합과 그 지도자들로부터 충당하고 있는 개혁주의적 노동자당이다. 그리고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의 기반인 이 개혁적 노동자 대중에 개입해야 한다. 이 노동자들이 개혁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옆에서 함께’ 싸우며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급진좌파는 새로 만들어질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 제정 논의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라며 당의 강령 후퇴에도 불구하고 “그들 옆에서 긴밀히 개입하고 앞으로 건설 될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투쟁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설사 “개혁주의적 노동자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회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리주의 정치노선과 노동조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참여자체를 반대한다. 의회주의 정당이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없듯이 조합주의에 기반한 노동자정당이 결코 의회주의를 넘어서 수 없다. 이들은 타락한 조합운동과 개량화된 정치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된 결과물이며, 노동자조직, 노동자당을 참칭하고 있지만 현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쇠퇴해가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공생관계 속에 있다. 이들이 노동조합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진보정당의 지분을 행사하며 자본과 권력에 타협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계급투쟁에 중재자, 사회적 합의자로 나서 투쟁을 무너뜨린 행보를 보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강령 개정 의미

이번 민주노동당의 강령개정의 의미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권력 재편기를 맞아 계급의식과 대중운동을 더욱 급진화 시켜 부르주아 정치와의 적대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계급적인 대중성을 좇아 자신들이 이미 공문구로 만들어놓은 사회주의라는 가치마저 삭제해버린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나아가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결국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정당과 손잡기 위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했기 때

문이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리는 '사회주의'를 일찌감치 삭제해서 민주대연합에 대한 걸림돌을 미리부터 제거해 버린 것인가? 자본의 위기전가로 생존권 위협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고통마저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와 득표를 위해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당과의 야합에 열중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언제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공공연하게 공격할 것인가는 그 야합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둘째,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를 막론하고 세계 도처에서 계급투쟁의 부활이 확산해지면서 혁명의 현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명백히 단절한 혁명운동 세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아직 전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라는 가치가 이제는 단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직접 다가오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혁명적 실천을 강제하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진보정당/조합주의 운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을 사회주의라는 외피로 포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쇠락해가는 운동들의 위기의식의 표현이자, 자기방어 행위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끝 모를 위기상황 속에서 위기의 결과가 혁명으로 진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본가계급에게, 피할 수 없는 일대격돌의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기피하고 혁명의 당위성마저 제거하여 체제 내로 편입하려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삭제는 자본가계급에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행위이고, 노동자계급에겐 총부리를 겨

는 행위이다. 결국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운동이고, 계급 투쟁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강령 개정은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노동자정당을 표방하고 노동자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득표와 의석수, 집권을 위해서라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도 불사하는 의회주의 정당의 본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들과의 강령논쟁은 부분적인 논쟁으로 개선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강령 전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이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혁명을 방어하는 길이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자립성과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반노동자적인 사회민주주의 조류에 대해 타협 없이 투쟁해야 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다함께처럼 개혁적 노동자 대중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대리주의 정치에 개입하기보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계급의식의 발전과 계급의 자립화를 앞당긴다. 이미 노쇠한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운동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롭게 올라오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질곡에 착목하라! 여전히 노동자들의 99% 이상은 민주노동당의 밖에, 90% 이상은 민주노총의 밖에 있지 않은가?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물들지 않은 이들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민주노동당 안에 아직까지 사회주의자들이 남아 있다면, 적어도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되어 줄 이들에게 이미 오염되고 깨져버린 그릇을 내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대리주의의 기원과 본질

제2 인터내셔널(1889~1914)시기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점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 기반을 확대해나가고 당의 의회 의석수를 늘려나가는 데 전념할 필요를 강조했다. 영국의 사민주의자 에드워드 데이비드가 “혁명주의의 짧은 개화는 매우 다행히도 과거의 일이 되었다. 당은 의회에서 그의 권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확장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이래, 베른슈타인(1850~1932)의 수정주의와 카우츠키(1854~1938)의 중도주의가 득세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면서 조합주의와 의회주의가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카우츠키는 이미 1902년에 ‘점진적인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적이며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를 주창했다. 프롤레타리아 당의 임무는, 이러한 점진적인 운동 체제 내적에 강제할 목적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를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카우츠키에게 프롤레타리아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진정한 계급의 조직이면서도 동시에 혁명에 가장 앞장서는 전위이자 혁명기관이 더 이상 아니었다. 당은 통치기구가 되었고 노동자들은 당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 당에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활동과 권력을 당에 위임해야 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의 탄생 배경이며, 사회민주주의가 노동자계급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맑스주의 왜곡의 역사의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들의 공공연한 목표로 부르주아 국가의 정복 또는 노동자정부의 창출을 말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실질 권력인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계급의 대중정치 조직과 직접정치는 언급하지 않거나, 과거 스탈린주의의 산물로 왜곡시켜 놓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와 구분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권력의 쟁취는 오직 당에 의해서만 획득되고, 그 당의 지도력과 물리적 힘은 대중들의 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당에 투표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권력을 그 당에 위임하기를 원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에 맞서 싸워온 역사이기도 하다.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한 왜곡된 사상의 창시자이자, 대리주의 정치의 두 조류.
왼쪽부터 베른슈타인(1850~1932), 스탈린(1879~1953)

한편 스탈린주의 공산당들 또한 의회주의에 편입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마저 사라지게 되자, 이 두 조류는 대리주의 정치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이제는 대중성을 얻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을 지지하는 스탈린주의 변종 노선과 사회민주주의 노선인 진보신당, 사회당류가 대립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도 동

일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대리주의 정치가 자발적 계급투쟁을 가로막고 계급의식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이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의 모든 조직체계를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으로 바꾸어 놓았고, 대중투쟁의 참여조차 자신들에 대한 지지획득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부르주아 선거조직과 선거활동은 모든 것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보정당들의 부르주아 정치 참여는 오히려 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계급투쟁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주체의 측면에서, 이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선거 시기조차 현장의 노동자들과 평당원들은 투표하고 돈 대는 일 말고는 직접 발로 땀만 한 일이 거의 없다. 실제 정치활동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작업장에 갇혀 있거나 합법적인 틀 내로의 정치활동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의 직접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대신 할 상층 지도부나 명망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이들 중 일부가 대리정치를 이용하여 이리저리한 권력과 기득권을 행사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 정치와 타락한 노동조합주의가 만난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운동 내의 최악의 계급배신 행위들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일상의 정치에서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민주노총 등의 배타적 지지에 기댄 채 관료적인 상층부 운동으로만 일관해 왔다. 여기서 현장노동자들은 투쟁의 주체에서 늘 대상화되거나

상부의 지침에 그저 열심히 따르는 수동적 당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진보정당들도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이러한 수동화된 운동의 축적은 대중의 자발적 행동을 억누르는 역할과 노동자정치의 혁명성과 창조성을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리주의 정치의 본질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려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부르주아 체제의 수호자 역할임이 밝혀졌다. 이제 모든 대리주의 정치와의 단절, 그리고 전면적 투쟁을 통해 이들에게 넘어간 노동자계급이 다시 계급성과 자립성을 회복해 전투적, 혁명적 계급운동 진영으로 넘어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자립화를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사회 내부의 모든 다른 계급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혁명으로 향한 계급투쟁의 전개에 있어서 제1의 전제조건이다. 인민전선과 같은 타계급 · 계층들과의 모든 동맹들은, 특히 부르주아 정파들과 동맹은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오직 적들 앞에서 노동자계급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민주노동당 강령의 개정은 부르주아 정파들과의 동맹을 완전하게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을 완전히 훼손시켜서 노동자정당이라는 성격조차 잃게 하였으며, 결국 부르주아 진영으로 투항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노동자정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에 남게 된 노동자들은 즉각 민주노동당과 단절하고 진정한 계급정당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계급정당에 걸맞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의식이 실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혁명 강령을 중심에 두고 정치적 선택과 정치세력화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급에겐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직이 있다. 전체 노동자계급을 투쟁을 통해 단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의 대중조직과, 계급의 가장 정치적으로 의식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그들이 전체 계급투쟁에서 조직적인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 계급의 정치조직이 그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두 가지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의 조직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혁명당의 강령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힘이 없고 기세가 약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혁명적 원칙은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 전망이다. 모든 대리주의 정치를 넘어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째, 반노동자적인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성과물인 혁명 강령이라는 무기를 들고 혁명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련되고 혁명적인 부위들은 혁명당으로 집결하여, 자본과 국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투쟁의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분을 전취하여 투쟁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꿈무늬를 좇는 의회주의 정당들이 아닌 혁명당만이 계급의식을 발전시키

고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망을 설정하고 혁명적 무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갈수록 제도화, 관료화, 기구화 되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운동과 조합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노동자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실현되는 투쟁조직, 총회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공장의 담벼락과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계급의 대중조직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수평적 노동자조직들의 출현만이 계급투쟁이 전면화 되는 시기에 노동자평의회를 현실화 시켜줄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노동조합운동의 상층부는 노동자계급의 분리와 분열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이들을 넘어서서 직접행동을 더 넓게 조직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길이다. 이런 기운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락한 운동들은 더욱 반노동자적 본색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낡은 형식과 분열을 넘어 직접행동하고 계급의 단결을 만들어나가는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자투쟁의 새로운 주체이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계급운동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며, 혁명당은 이것을 토대로 건설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계급 자립화의 실체이다.

사람의 몸은 해로운 병균의 공격을 받으면 항상 반응을 한다. 사람의 몸은 나쁜 것을 점검하여 그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병균을 파괴하는 항체를 만들어 낸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조직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 비록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거

센 공격이 있을지라도 혁명적 조직은 살아남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 안에서 자라난 혁명적 방어 기제가 건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든 조직이 노동자계급을 떠나는 순간 그 조직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부르주아의 대열에 합류하는 길 밖에 없다. 이 때 노동자계급은 단호하게 그 썩어가는 시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쟁의 무기를 재구축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으로부터 떠간 진보정당은 부르주아 진영으로 넘어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의 온갖 합병증에 걸린 진보정당들에 남아서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는 건강한 노동자성마저 병들어 썩어 갈 것이다. 언제까지 썩은 시체를 부여잡고 있을 것인가?

진보정당운동 10여 년, 이제는 진보정당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딛고 노동자가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의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자! 그것은 대리주의를 걷어내고 지금 당장의 직접행동과 노동자 혁명당 건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반란 ; 이 운동은 그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실업자인 젊은이들이 노동자계급의 무기들, 즉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총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무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연대를 확인하고 정치적 정당들과 노동조합의 외부에서 운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지라도, 그와는 반대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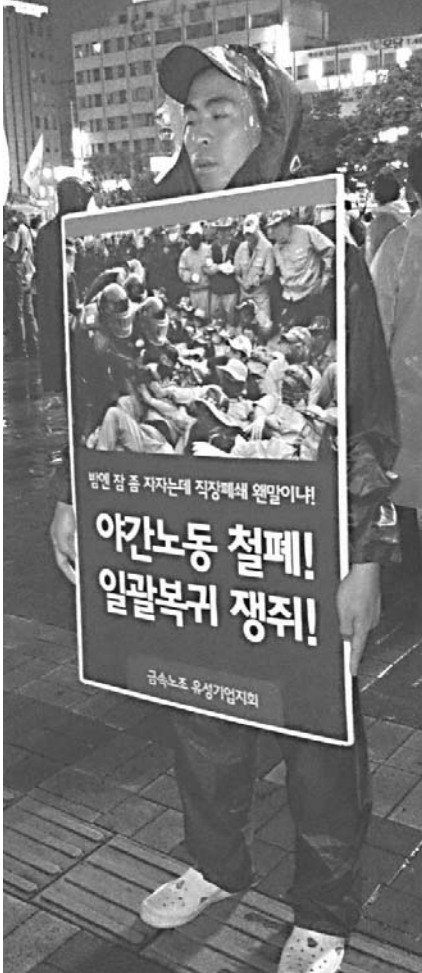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구재보

유성지회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조 사수, 일괄복귀 쟁취에 초점을 맞춰서는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 쟁취 요구를 전면으로 내걸고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지부의 반노동자적인 주간연속2교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성지회와 현대차, 기아차와 부품사의 활동가들이 함께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걸고 현대차의 공동투쟁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일괄복귀로 쪼그라든 주간연속2교대 투쟁



유성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계기로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이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유성지회는 주간연속2교대를 요구했고 작년 유성자본한테서 2011년부터 실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본은 일개 부품사에 불과한 유성에서의 주간연속2교대 실시를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결국 현대기아자본은 유성자본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간연속2교대를 저지할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초토화시킬 것을 지시했다. 5월18일 공격적 직장폐쇄에 이어 용역깡패와 공권력 투입, 이명박정부와 언론의 연봉 7천만 원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부와 현대기아자본의 합작품이 유성지회를 상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파업투쟁 60여 일이 지난 지금 주간연속2교대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일괄복귀라는 요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현재 유성지회는 2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3명의 동지가 조계사에서 수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장 앞 농성장에서는 ‘늪노동자’가 한달 여 가까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괄복귀를 요구하면서 공장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6월22일 투쟁 이후 공장 앞은 경찰에 의해 집회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성자본은 복귀자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계급적 의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256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이유는 바로 주야맞교대 근무형태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의 생체주기 파괴 및 심각한 수면장애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지속적인 피로, 행동의 변화, 소화기 증상, 수면제 사용을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독일 의학계에서는 심야노동이 평균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밤엔 잠 좀 자자!’라는 외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정권과 자본이 순순히 들어줄 리 없다. 주야맞교대는 생산의 유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변동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인 근무형태이기 때문이다. 시장수요가 없으면, 다시 말해 물량이 없으면 산업2시간을 줄이거나 특근·철야를 없애면 된다. 반대로 물량이 많으면 산업과 특근·철야를 포함해서 1년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기계를 1분 1초라도 놀리지 않으려는 자본의 탐욕 속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는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임과 동시에 계급적 요구이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야간노동 철폐에 따른 신규공



장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공장 건설 → 정규직으로의 일자리 창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바로 이것이 모든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계급적인 측면이다. 이것이 빠진 노동시간 단축이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3무(無) 원칙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올곧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원칙들이 있다. 특히 주간연속2교대 투쟁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른바 3무(無)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첫째,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현대자본은 UPH 업, 편성률 상승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할 경우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현

장을 자본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삭감이 없어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를 쟁취해야 한다.

셋째,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 현대자본이 주장하는 대로 물량이동, 전환배치, 혼류생산 조정을 자유롭게 할 경우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주화 금지, 정리해고 금지 등 고용불안을 제기하는 요소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지부의 꿈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는 1997년 대우자동차 노조와 케피코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 시기 현대자동차노조 역시 제도개선위원회 차원에서 제시되긴 했지만 곧바로 터진 IMF 구제금융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2004년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었다. 완성차 공장에서 시작한 주간연속2



교대와 월급제 쟁취 투쟁은 2005년, 2006년 실행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을 뿐,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작년 두원정공지회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올해 유성지회의 투쟁이 전개되면서 노동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차 역시 올해 임단협 투쟁의 핵심적 사안으로 주간연속2교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얼마 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인원충원 없는 30 UPH 업, 중복휴일 반납, 2조 근무 10분 연장 등에 대해서 사측과 가합의했다. 이것은 주간연속2교대 요구의 근본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자본의 배후조종, 용역깡패와 정권과 자본의 가공할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두 달이 넘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유성지회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지부의 반노동자적인 주간 연속2교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성지회 투쟁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배후조종은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사의 주간연속2교대 논의뿐만 아니라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사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과 자본이 상신 브레이크, 발레오만도, KEC 등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며 초토화시키고 있는 노조 죽이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은 작년 금속노조의 타임오프 투쟁과 같이 개별사업장 노사가 다양한 꼼수를 부려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에 정권과 자본이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유로부터, 그리고 현대차 자본이 맨아워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부터 승리의 전망을 찾아내야 한다.



며칠 전 현대차지부 현장제조직은 '박종길 열사 정신 계승, 타임오프 분쇄,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2011년 임단투 승리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노사간에 가함의된 사항들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때문에 유성지회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조 사수, 일괄복귀 쟁취에 초점을 맞춰서는 승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 쟁취 요구를 전면으로 내걸고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지부의 반노동자적인 주간연속2교대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성지회와 현대차, 기아차와 부품사의 활동가들이 함께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걸고 현대차의 공동투쟁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를 통해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을 다시 한 번 쟁점화·전국화 시켜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사 간의 기만적인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서 현장노동자들을 결집시키자.

십수년간 단결과 연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투쟁해왔던 유성지회의 투쟁이 패배할 경우 그 여파는 전국 노동자들을 뒤흔들 것이다. '가장 강력했던 조직력과 투쟁력을 자랑했던 유성지회도 깨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라는 패배감과 자포자기가 만연해질 것이고, 단결과 연대투쟁 대신 협조와 양보가 판을 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성지회 동지들이 열어놓은 작지만 소중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홀로 걸어가게 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

역명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근처 희망버스의 아쉬움을 딛고 전선을 확장하자! -

김명석

정치적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대중 직접행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보인 희망버스 운동은 해고와 분열로 죽어가는 한진중공업 노동현장의 외로운 투쟁에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리하고 노동자들이 185 일째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의 손길을 내민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아니라 "정리하고 철폐"를 전면에서 걸고 모여든 자발적 다수대중의 결집체인 희망버스였다. 소금꽃나무 김진숙과 85호 고공크레인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급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발적 대중의 창조적 투쟁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대중투쟁은 기존의 관성화 되고 굳어져버린 조합주적인 낡은 투쟁방





정리하고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2차 희망버스 대중들. 이들은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며 계급투쟁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있다.

식을 깨뜨리며 자발적 대중의 창조적 힘을 모아내는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힘차게 가두투쟁을 벌이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해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모습은 자발적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연행자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다음날까지 이어진 집회에선 활기찬 정치발언들과 신명나는 문화제, 자발적 음식나눔 등 특유의 활력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희망버스에서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운동의 자기이해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그 진정성이며 넘치는 기운과 지치지 않는 활력의 그 역동성이다.

이제 희망버스 투쟁은 한진중공업 어용세력에 맞서 정투위 내부의 새로운 투쟁주체와 지도력을 세우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6월27일 어용 채길용 집행부는 모든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합의서에 직권조인 했다.

채길용의 배신행위는 2009년 정리하고 칼바람이 불 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채길용 집행부는 “잘못하면 쌍용차 꼴 난다”면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조장해

왔다.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 동지들의 전투적 투쟁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으로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멀리서 지켜만 보다 겁먹은 한진 어용 집행부는 마지막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할 계획보다 기껏 여론을 잡아야 한다며 개량주의 정당과 한 통속이 되어 시민선전전에 투쟁을 제한했다.

어용 집행부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은 분열주의자로 몰아붙이고 비판과 토론을 통제했다. 이러한 관료적 작태는 조합원들을 수동화, 객체화 시켰다. 심지어 김진숙 동지를 소영옹주의자,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투쟁하려는 조합원들과 이간질시켜 결국 조합원들을 하나둘씩 희망퇴직으로, 농성장 밖으로 밀어냈다. 그 이후에도 만행은 이어져 85호 크레인농성장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와 모욕으로 연대단위의 연대를 막았다.

어용 집행부에 맞서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지도력을 세워내야

어용 채길용의 반노동자적 배신행위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 이미 조합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리하고 문제를 밀실야합으로 직권조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의 큰 사유가 된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대규모 2차 희망버스가 조직되고 있었고 그러한 대중들의 기세에 눌러 국회 청문회 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때 맞춰 보수집단들은 노사합의로 원만한 해결을 환영하다며 이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희망버스가 외부 불순세력의 책동이라며 악선동 하고 있다.

연대전선을 분열시키려는 더러운 이념 공세를 불러들인 것이 바로 채길용 어용세력이다,

그동안 수많은 만행을 지켜보면서도 적진분열과 노노갈등을 염려하며 껌대기뿐인 민주노조 허울을 쓴 어용세력들의 통제에 잠시 머뭇거렸어도 이제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 투쟁을 통해 정투위 내부를 다시 정비하고 노동조합을 민주적, 계급적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를 대며(“지금 동력으로 채길용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이대론 9월 선거에서 채길용이 당선될 텐데, 회사와 결탁해 성과금으로 조합원과 해고자들을 분열시켜 고립시킬 것이다” 등등.) 미리 체념과 패배의식에 젖어 어용세력에 맞선 투쟁에서 뒷걸음질 친다면 정리하고 뿐 아니라 민주노조의 미래도 없다.



계급적 투쟁주체는 변혁적 계급의식과 정리하고 분쇄라는 명확한 투쟁의 목표를 가지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가운데 만들어진다.

탄핵투쟁과 맞물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어용 채길용 집행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지도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누구보다 이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어용세력들의 갖은 반동적 행태를 185일 동안 고공에서 날날이 보아온 김진숙 동지일 것이다. 직권조인 후

던진 “조합원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날선 한마디는 그 자체로 투쟁지침인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크레인에 올라가기 전부터 젊은 조합원들과 학습모임을 함께하며 그들을 계급적 투쟁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도부는 끝내 어용의 배신행위를 묵인할 것인가

계급적 투쟁주체는 변혁적 계급의식과 정리하고 분쇄라는 명확한 투쟁의 목표를 가지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가운데 만들어진다. 공장 밖에서 연대 투쟁하는 쌍용노동자, 철거민, 학생, 농민들은 흔들림 없이 정리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희망버스의 진정성과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 정작 이 배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지도부다. 어용 채길용에 대한 어떠한 규탄도 없고 희망버스 대중들이 정리하고 반대를 외치며 연대의 깃발을 드높일 때 자신들의 싸움으로 앞장서 깃발을 올리고 나서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고 중앙교섭에 매달리며 이런저런 핑계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파업조차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지도부

의 관료적 행태는 비판 받아야 한다. 집회 자유 발언대에서 걱정적인 어조로 발언한 여성발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앞장서야 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 몇 사람만(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부, 금속 부양지부 일부)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들의 투쟁이니까 당신들이 조직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단 한진투쟁만이 아니다. 현자비지회, 유성 기업을 비롯해서 그간 크고 작은 투쟁에서 보여준 관성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실망한 대중들의 원망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장을 넘지 못한 2차 희망버스의 아쉬움, 3차에선 투쟁전선을 확장하자!

운동전망에 대한 지도부의 관점, 전술운용에 대한 문제, 기술적 운영의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평가와 반성, 비판이 나올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 평가와 반성은 7월 말에 다시 출발할 3차 희망버스의 더욱 활기찬 연대와 투쟁의 지를 북돋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3차 희망버스는 어용세력과 공권력에 포위되어있는 한진중공업 투쟁의 주체들을 어떻게 세워내야 하는가에 고민을 집중하여 기획해야 한다. 어용 채길용 집행부의 만행과 내부투쟁주체들의 힘겨운 싸움을 트위터와 진보매체 등에 지

속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보수집단들의 노사합의, 노사자율, 외부세력 운운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대중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전선을 조직하여 투쟁주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 지원해야한다. 또한 어용 채길용 집행부에 대한 대중적인 탄핵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미 탄핵명령서가 인터넷 진보매체에 노동자, 시민 일동으로 배포되면서 투쟁이 시작됐다, 금속노조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에 채길용 징계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계급투쟁전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소금꽃나무 김진숙을 아이콘으로 한 한진투쟁을 넘어 “밤엔 잠잠 자자”로 대변되는 유성 희망버스로 확장하는 방식을 기획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3차 희망버스는 곧 희망차게 출발할 것이다. 한진투쟁 주체들의 희망을, 그리고 이 투쟁에 연대하는 동지들의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할 3차 희망버스 투쟁, 이번엔 한 번 제대로 끝까지 투쟁해 보자! **역명**

1995년 LNG 선상파업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는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 • • • • • • • • •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병효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그리스. 그리스는 이미 작년 한 차례 구제금융을 통해 근근이 생명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고, 1년 내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에 대해 EU, IMF, ECB(유럽중앙은행)는 또 다시 고통을 강요했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추가 긴축안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스 의회 의원 300명 가운데 155명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PASOK)은 154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지난 6월 30일 EU, IMF, ECB 트로이카가 제시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리스 재정위기가 변질까봐 숨죽여 있던 유로존의 자본가들도, 나아가 세계의 지배계급들도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 안도의 숨도 채 두 주를 넘기지 못했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뒤 그리스 부채 문제는 다시 트로이카에게 넘어왔다. 7월 11일 그리스 지원 문제를 두고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재무장관 회의는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7월 21일에 EU 정상회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지만,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7월 말에 다시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뾰족한 답이 있을 리 없다.

7월 11일 투기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플랜 비(Plan B)’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플랜 비는 없다고 했던 자본가들이 이제는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소로스가 플랜 비를 통해 노리는 것은 개별 국가 수준을 뛰어넘어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금융 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리스 위기가 유럽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투기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 ● ● ● ● ● ● ● ●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DEI의 노조는 긴축안에 포함된 사유화에 반대하며 48시간 파업에 나섰지만 파업노동자를 결집시켜 힘을 모으는 대신 단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파업을 대체했다. 그나마도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파업 종료를 선언해 파업 대오를 교란시켰다.

그리스공산당(KKE)과 그 산하 노동조직인 전 노동자투쟁전선(PAME)은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군중을 소부르주아 운동이라고 폄하하고, 공공노조연맹, 노동자총연맹과의 공동투쟁도 거부하는 종파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투쟁을 확대시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집권 사회당 소속의 노조관료들은 아래로부터 떠밀려 몇 차례 관료적인 파업을 진행했을 뿐, 결코 투쟁을 급진화 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런 노조관료들의 행태는 준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급진화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확장하고 투쟁을 확대시키기보다, 형식적인 투쟁을 통해 오히려 감을 빼는 역할을 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차례 24시간 파업을 전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해 들어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소강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에 나섰다는 일면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식노조 지도부의 형식적인 시한부 파업 진행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관료화된 노조와 의회주의 정당은 노동자 투쟁의 역동성을 질식시켰다. 전술적으로도 준혁명적 시기에 혁명의 프로그램과 함

께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하는 대신, 관료적인 하루 시한부 파업으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투쟁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본가 권력에 작대기를 받쳐주는 체제 수호자 역할을 기꺼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타그마 광장의 ‘분노한 사람들’

소강상태에 있던 그리스 투쟁에 다시금 투쟁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한국에서 2008년 촛불 시위 또는 2011년 희망버스 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올해 5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 광장을 점거한 청년층들, 그리고 2월의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흐 광장의 점거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5월 들어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신타그마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부터 중간계급, 그리고 소자본가들도 광장에 참여하고 있다. 광장에서 거의 매일 열리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든 ‘분노한 사람들’ - 5월 29일

● ● ● ● ● ● ● ● ● ●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급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다른 정당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은 6월 30일 긴급안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급안과는 다른 정부 정책 운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와중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 역시 “EU 탈퇴, 드라크마(그리스 화폐)로의 복귀” 요구를 내걸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퇴행적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EU 탈퇴”가 아니라 “사회주의유럽연방”의 전망 하에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유럽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할 상황에서 그리스공산당은 그리스의 “경제 독립” 내걸며 노동자투쟁을 계급협조적인 인민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드라크마로의 복귀”는 그리스 기업과 자본가들을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실질임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자본가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긴급안 통과를 앞둔 48시간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및 의회를 둘러싼 군중들에 대해 최루탄을 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으며, 특히 긴급안이 통과된 후에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시내 은행에 탱크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당장 6월 30일 의회의 긴급안 통과 이후 다시 투쟁의 동력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7월 11일 아테네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신타그마 광장의 텐트를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리스 정부의 무능력이 준혁명적 정세를 열었지만, 대안적 행동이 지연되는 사이 자본가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

듬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투쟁이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 그리스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동의 역습이다.

이행요구의 현실성

지배계급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체제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도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소부르주아들의 삶의 기반도 붕괴되었다. 그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혁명이나, 반동이나 하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행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투쟁의 불길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를 즉각 무효화하고, 긴급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은행과 대기업에 대한 보상 없는 몰수를 단행하고 노동자통제 하에 경제를 재조직해야 한다. 그 동안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수준으로 최저임금 및 연금, 실업수당을 책정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은 혁명적 노동자정부가 즉각 취해야 할 가장 긴급한 조치들에 불과하다.

실제로 오늘날 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정세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 권력을 분쇄하고 혁명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24시간 혹은 48시간 파업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6월 15일의 24시간 파업, 6월 28일, 29일의 48시간 파업은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거나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했다. 결국 시한부 파업은

● ● ● ● ● ● ● ● ● ●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일치 결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느라 운영이 마비되고 있고, 투쟁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도 차단되고 있는 현 대중집회의 한계도 깨나가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 당은 그리스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노동자·인민평의회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현재 혁명적 의식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리스의 고양된 노동자와 청년들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혁명**



분노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 6월 29일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강종숙(학습지노조 위원장)



장투사업장,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이름

1895일, 그렇다. 기륭전자분회가 투쟁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5년하고도 2개월여의 길고 긴 시간.

1,300일, 2011년 7월 12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일이다. 3년을 넘어 4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KTX 여승무원,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투쟁 등 무수히 많은 장기투쟁의 사례들이 있다. 여기에 열거한 사례의 투쟁일수만 합해도 1만일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근래에 벌어진 투쟁들은 예외 없이 ‘장기투쟁사업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수백일 이상의 장기투쟁!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심신을 망가뜨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 협박과 성추행으로 하루하루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고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한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국 다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수백 일을 지낸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자본가들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수백일의 투쟁을 할 때까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으며 마무리 시점에도 완강히 버티면서 갈수록 굴욕적이고 심각한 내용을 담아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가 먹혀들고 있다.



이제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 지도부는 물론 가장 비타협적으로 싸운 평조합원까지 복직에서 제외되는 선별복직이 관례가 된 지 오래다.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까지의 복직유예기간이 기본이 되고, 으레 쌍방취하로 정리됐던 민형사 소송도 갖은 조건을 달거나 합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까지 한다. 단지 업포용 가압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고 압류경매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선례’라는 이름의 족쇄

장기투쟁이 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신분 자체가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온다. 또 많은 사업장이 장기투쟁으로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중도에 떠나가고 결국 소수만 남아 단식, 삭발, 고공농성 등을 결행하며 결사적으로 버티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대책위나 공동대책위, 공동투쟁본부의 힘이 요구되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기에 ‘마무리’ 시점에서 온전하게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선례’라는 이름의 족쇄이다. 그것도 노동자들에게는 갈수록 가혹해지고 굴욕적인 ‘선례’.





너무나 처절하고 아픈 투쟁의 기억, 그러나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만 하는 기억

수백 일을 처절하게 싸우며 자본가들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이를 박박 갈던 투쟁사업장 노동자 그 누군들 가혹하고 굴욕적인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싶겠는가? 그 긴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가장 앞장서 싸웠던 동지를 두고 나만 복직하는 것이 미안하고 분통해서라도 좀 더 버텨서 모두가 복직하고 굴욕적인 합의문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급단체나 지대위, 공대위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고(자본가들은 특히 비정규직투쟁과 관련해서는 기를 쓰고 당사자를 빼고 제3자와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설득에 갈등하게 된다. 너무나 현실적인 고통과 처절하고 아픈 투쟁의 기억이 맞물리면서 성에 안 차지만 못 이기는 척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게다가 또 다른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픈 욕구도 강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너무나 처절하고 아팠던 만큼 다시는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기억을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한다. 바로 그 길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고 다시 ‘선례’에 무릎 꿇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새로운 선례는 가능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을 때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선례는 단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다른 사업장에서의 투쟁돌입과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대처한다.

학습지노조의 지난 5년여의 투쟁만 놓고 보더라도 2006년 대교투쟁과 2007년 한솔교육투쟁이 달랐다. 한솔교육은 해고자복직과 관련하여 6개월 동안 해고자에 대한 ‘평가’기간을 요구했고, 민사소송에 따른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재능교육이 올 초 들고 나왔던 안을 보면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대해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역시 3년에 이르는 복직 유예기간과 선별복직, 한솔교육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취하 거부 등을 들고 나왔다. 보는 것처럼 ‘선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개별사업장만의 합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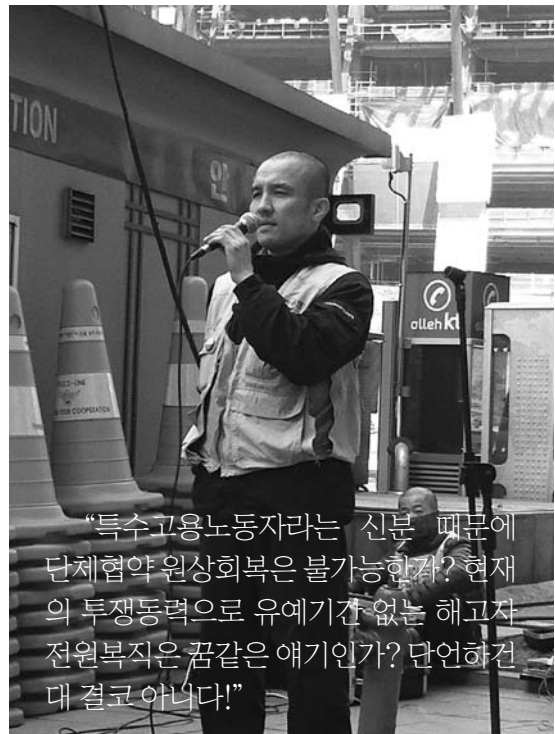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하고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역시 기존 ‘선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노동자들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본가들에게는 뼈아픈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인가? 답은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

우리가 힘든 만큼 자본가들도 힘들다.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투쟁동력으로 유예기간 없는 해고자 전원복직은 꿈같은 얘기인가? 단언하건대 결코 아니다. 3년을 버티던 재능교육이 어쨌든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체협약 원상회복 없이는 결코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기가 자본가의 눈에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친다면 새로운 선례는 가능하다. 우리가 복직을 위해 3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기간만큼 더 싸워서 3년 되는 날 복직하겠다는 각오로 싸운다면 새로운 선례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두들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투쟁. 재능교육지부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동지들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함께 어깨 걸고 일단 첫 발을 내딛자. 그리하여 새로운 선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역명**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투쟁동력으로 유예기간 없는 해고자 전원복직은 꿈같은 얘기인가? 단언하건대 결코 아니다!”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주)재능교육의 치졸한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1300여일이 넘도록 곳곳히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재능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재능지휘 투쟁 승리를 열어나가는

투쟁문화제

일시: 매주 화요일 / 장소: 시청 재능사옥 앞

(주)재능교육은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각 사무실에 실현 불가능한 영업목표를 하달해 가짜 회원 양산을 강요하여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이에 따르는 희비대담을 강제해 왔습니다. 더불어, 작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유령교사' 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의 범법행위 또한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정현철

1997년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에 의해 유예되었던 복수노조 설립은 2001년 또다시 “동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미루어졌고, 급기야 2009년에 ‘동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로 늦춰지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개정되고 무려 14년 만에 진짜 복수노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왜 금지되었던 것인가?

복수노조 금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47년 미군정 노동부가 발표한 통첩인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에 관한 건’에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협약체결단위는 別般의 지시가 없는 한 공장사업장 등 직장단위로 하고 산업별 기타 단위로 하지 않도록 할 것’, “하나의 직장에 고용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하나의 단체로 국한하되, 그 단체는 당해 단체협약단위가 되는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당시 노동조합 수나 조합원 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견제하고 대신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대한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정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은 이승만 정권을



거쳐 1961년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1963년 노동법개정에서 제3조 노동조합 정의 규정의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로써 군사정권은 노동운동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정권이 인정하는 충직한 시너 ‘한국노총’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영욕의 시절을 보내게 된다.

신기하게도 이 법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데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바뀌면서 그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급세력의 확산을 두려워한 한국노총과 8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표를 의식한 민정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987년 12월 마창노련 건설을 시작으로 불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투쟁은 1988년 11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대회의 제목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였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때부터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등을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이 불러온 새로운 풍경들

이 글에서, 정권과 자본이 복수노조 허용과 진입자 임금지급 금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통제하려는 술책에 대해서 더 서술하지는 않겠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이 벌였던 야합의 역사도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투쟁 보다는 국회의원 뒤통무니 쫓아다니면서 ‘정치’하기에 바빴던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다.

대신 다음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자.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삼성에버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경기도 용인시청에 설립신고를 냈고 사흘 뒤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노조위원장인 푸드사업부 차장급 직원이 맡았으며, 조합원 수는 4명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무노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삼성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해 사측에 우호적인 이른바 ‘무늬만 노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삼성에버랜드는 노동계가 노조 설립 타깃으로 삼은 전략사업장 중 하나다.

-2011년 7월8일 노컷뉴스 기사 발췌-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 시행 직전에 부리나케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노조 관련하여 개정된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근거하여 2년간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삼성에버랜드에 생긴 노조는 현재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노조법 체계에서는 삼성에버랜드에 복수노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향후 2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금호고속에서 첫 노·노갈등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금호고속지부(지부장 이기수)는 11일 광주 금호터미널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 새 노조인 민주노총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의 파업과 관련, 새로운 단체협상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한노총 금호소속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 임단협을 체결한 상태인데 또다시 민주노총 노조가 회사 측에 임단협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노총 노조의 어떠한 협상요구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노조가

기존 노조를 어용노조로 편취하거나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2011년 7월11일 한국경제 기사 전문-

한국노총 금호고속지부가 성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일까? 일단 아니다!

노동부는 7월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에서 “7.1 현재 하나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조는 교섭중인 경우 교섭중인 노조는 기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기존(기득권)노조와 신생노조의 다툼을 단순하게 한국노총-민주노총의 힘겨루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조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유예를 맞바꾸면서 14년을 버티는 동안 민주노

총 역시 그에 못지않은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민주노총=민주노조’ 라는 등식은 상당부분 무의미 해졌다. 위에서 예로든 사례는 언제든 그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자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용노조의 득세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제 발등 찍기임에 분명하다.

사용자가 만족하면 “복수노조 순항”인가

고용노동부가 오늘 ‘상반기 노동관계 현황’을 발표하고, “복수노조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무리 성과위주 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지만,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렇게 왜곡하고 부풀려선 곤란하다. 더구나 복수노조 시행 일주일의 결과로 ‘새 노총 설립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까지 붙여놓았다고 하니, 그 의도가 알만하다.

...
 오히려 ‘새 노총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 속에 창구단일화 강제제도의 진실이 숨어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생겨난 복수노조 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주도하는 어용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KEC의 경우, 지난 6월 조합원 면담 자리에서 “회사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그 전조를 보여 왔다. 발전3사의 복수노조 역시 이미 민주노총 탈퇴 과정을 밟았던 동서발전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등장한 한 호텔 사업장 역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이뤄졌던 사업장으로,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하면 되고, 민주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소수 어용노조를 만들어 자율교섭을 진행하면 된다. 제도시행 초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출현이 줄을 잇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채택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이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2011. 7. 11.

-민주노총 논평 발췌-

자본과 정권은 작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올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다. 전임자 임금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동시에 길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해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정리하도록 강제하여 앉아서 코 푸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노조는 길으로는 '노조법 재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전임자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남보다 먼저 복수노조의 대표교섭노조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징

징거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평가와 그것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데 노조는 죽지 않을 만큼만 비겁할 정도로 버티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속빈 괴물이 될 것인지?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투쟁의 축이 될 것인지? 답은 나와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 어찌면 알고도 안 쓰는지도 모르겠다. **역명**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평가와 그것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사노련 재판 항소심 모두진술문

**사상재판을 중단하라!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세철



2008년 8월 26일 우리는 공안기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저들은 우리를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규정하고 쌍용 자동차, 현대 자동차, 이랜드, 뉴코아 등 노동자 투쟁, 용산 철거민 투쟁, 그리

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기각 판결을 내려, 검·경의 체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모하고 자의적인지를 만천하에 밝혀주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사노련 사건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공소기각 되어야 할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려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다.

1심 모두진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맑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

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생산, 권력 그리고 역사의 주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맑스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공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운동과 세력을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존재한다면, 이 사회와 그를 유지하려는 법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끝장내는 역사적 재판이기를 바란다.”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3만 쪽이 넘는 증거자료와 100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워 1년 가까이 지루한 재판을 끌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첫째, 노동자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제시한 증거의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전체적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여러 명의 맑스주의 연구자들과의 법정 논쟁에서 자본주의 위기,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 대중의 봉기와 투쟁 등에 대한 검찰의 이해 부족과 시대착오적 해석이 드러나면서 사상 재판의 부당함이 밝혀졌다.

셋째, 수십 개국의 세계 맑스주의들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국내 500명이 넘는 진보적 학자들이 사노련 재판의 부당함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무죄 판결을 권고하는 서명과 운동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현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이에 맞서는 사회주의 세력의 투

쟁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한국은 세계적인 비난과 수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우리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 번 맑스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실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첫째,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둘째, 생산, 권력,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계급과 함께 투쟁하자!

셋째,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노동해방 사회 건설을 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는 유죄 판결을 내건 1심결과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넘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판과정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 중에 오직 사노련이 발행한 기관지, 신문과 책자에 실린 글만이 판결의 대상이 되어 학교, 연구소 그리고 모든 사회운동 단체가 발간하는 출판물이 광범위하게 공안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가장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변란의 명백하고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보안법’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판결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셋째, 글 하나하나를 유죄, 무죄로 재단함으로써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판결의 잣대가 되었다. 학술지에 실리는 이론적 논문까지 유죄로 판결하는 웃지 못 할 경우도 포함되는, 판결이 아

닌 논문 심사가 된 희화화된 판결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항소심 재판 과정의 첫머리에서 있다.

긴급 체포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가 부채로 인한 위기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넘어 전 유럽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남미를 넘어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실업, 연금 삭감 등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의 삶을 야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답게 살려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처절한 투쟁으로 솟아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한진 중공업, 유성 기업, 재능 교육 등의 노동자 투쟁,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투쟁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세계정세와 우리나라의 정세 속에서 사노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은 1심 재판이 끝난 후 해산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맑스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로서 자본주의

위기와 모순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필연적 쇠퇴와 폐지를 말과 글로 표현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려는 몸부림과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이 재판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위에서 1심 판결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 번 사상재판을 멈추고 사상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혁명**

2011년 7월 8일

오세철



혁명 구영

창간준비
1호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 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은 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602-01-257654(김병효)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 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창간준비 1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